
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“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,
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”

2024. 1.



순서

I. 2023년 핵심 추진성과	1
II. 202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	2
I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	4
1. [안전] 안전한 환경관리, 든든한 민생	5
2. [성장] 무탄소 녹색성장, 단단한 경제	9
3. [환경서비스] 촘촘한 환경복지, 따뜻한 사회	17

I. 2023년 핵심 추진성과

◇ 작년에 국민께 드린 「3가지 약속 + 3」, 차질 없이 이행

① [탄소중립 실행 가능성·책임성 제고](제1차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)

- 원전 적극 활용 및 재생에너지 목표 현실화
※ 이해관계자(산업·노동·청년 등) 이견, 대화·설득(35회)으로 조정
- 폐배터리, 폐플라스틱 등 순환이용 촉진(클러스터 착공, 재생원료 목표 시행 등)

② [녹색산업·규제] 녹색산업 수주·수출 20조 원 달성, 킬러규제 혁파

- 민·관 원팀(녹색 Alliance, 1월~) 구성하여 세일즈(17국, 25회) 추진
- 환경 킬러규제 혁파*, 연간 3.3조 원 경제효과 창출
* 화학물질(신규 등록기준 0.1→1톤 등), 첨단업종 지원(반도체·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 등)

③ [물관리 百年之計 수립] 과학과 실용의 물관리로 전환

- 4대강 보 정상화(철거 → 과학적 활용(8월, 국가물관리위원회))
- 일상화된 극한 호우 대응, 치수 패러다임 전환
* (댐·준설) 담보 → 본격 추진, (하천 정비) 분류 → 지류로 확대, (예보) 사람 → AI
- 역대 최장기간 가뭄(광주·전남),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극복
* (여수·광양 산단) 공장 가동 중단 없이 가뭄 극복, (도서 지역 등) 해수 담수화 선박 등

④ [+3 약속] 자연·보건·공기 등 환경 서비스 제공

- (자연)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(7년 만에 신규 지정)
- (보건)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가속화(누적 5,667명, 전년 비 3배)
- (공기) 무공해차(59만대) '22년 대비 39% 증가, 5등급 노후경유차 추월(57만대)

Ⅱ. 202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

1 안전한 '환경' → 민생의 버팀목

□ 갈수록 강해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가 국민 안전 위협

-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, 하천제방 월류·유실로 인명·재산 피해
- 극심한 가뭄(남부지역 50년만의 가뭄), 신도시·산단개발 등 물수요 증가
- 21세기 후반 극한 강수량 증가, 지역·계절간 강수편차 심화 예상

□ 초미세먼지, 화학제품 등 생활 속 환경 위해에 대한 국민 불안 지속

- 기온 상승, COVID-19 종식 등으로 초미세먼지 악화 우려
- 생활화학제품 소비증가, 구입경로 다양화* 등으로 국민관심 증대
* 생활용품 온라인구매 : '20년, 14.5조원 → '21년, 16.0조원 → '22년, 16.5조원

□ 자연 향유,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

- 친환경 여가 수요 증가 중이나, 자연혜택 이용 정책은 다소 미흡
* 정책 인지도('23.6) : 멸종위기종 복원 83%, 보호지역 지정 83%, 교육·이용 42%
- 전시동물 복지개선 여론(갈비사자, 얼룩말 세로), 야생동물 피해사례 증가

추진 방향

◇ 안전을 위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기후위기 관리에 만전

↳ 인프라 구축, AI 활용 분석·정보제공, 취약지역 중점 관리 등

◇ 생활환경서비스 국민만족도 제고, 정책고객 수요에 신속한 대응

↳ 풍부한 물, 맑은 공기, 화학제품 안전, 자연혜택 등

□ 전 세계는 **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변화 가속화**

- 탄소비용을 수입품에 부과, 보조금 반영 등 **탄소무역장벽화**
 - ※ EU 탄소국경조정제도 '26년 본격 시행,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에 탄소배출량 반영 등
- 그린수소 등 **무탄소에너지(CFE) 확산**, 수송·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 중

□ **자원공급망 위협 확대, 순환경제는 국제 흐름**

- 에너지와 함께 **광물자원(희토류, 리튬, 코발트 등)도 자원무기화 우려**
- 재생플라스틱, 재생금속, 바이오연료 등 **재생원료 사용 의무화**
 - ※ EU '30년까지 재생플라스틱 30% 의무화, 재생금속 포함 배터리법 승인('23.6월)

□ **녹색투자로 글로벌 녹색시장은 본격 확장 중**

-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은 1.3조 달러(1,600조원 상회) 규모로 추정('22)
 - **ESG 공시 의무화***로 녹색투자 지속 증가 전망
 - *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('23.6월), 美 기후공시 '22년 초안, '24년 확정 전망
- 국내 녹색시장 규모(34조원)는 전 세계 **2% 수준**
 - '23년 **한국형 녹색분류체계** 본격 도입으로 녹색투자 수요 대폭 증가
 - ※ 녹색투자 규모 : '20년 0.35조원 → '21년 0.4조원 → '22년 1.8조원

추진 방향◇ **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질서에 전략적이고, 발빠르게 대응**

↳ 탄소중립, 순환경제 적기 추진, 규제혁신으로 체질 개선

◇ **녹색산업 내연과 외연 확장을 통해 글로벌 녹색강국으로 발돋움**

↳ 임기 내 수출 100조원, 녹색 내수시장 확장 도모

Ⅲ. 2024년 핵심 추진과제

비전

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,
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

추진 방향

- ◇ 안전한 환경관리, 든든한 민생
- ◇ 무탄소 녹색성장, 단단한 경제
- ◇ 촘촘한 환경복지, 따뜻한 사회

3대 핵심 과제

1. 안 전

☐ 새로 짠 물관리 百年之計, 본격 실행
☐ 모두가 숨쉬는 공기, 깨끗하고 건강하게
☐ 생활 주변 환경위험, 꼼꼼한 안전망 구축

2. 성 장

☐ 국가 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
☐ 그린오션 녹색산업,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
☐ 글로벌 수준으로 환경규제 혁신

3. 환경서비스

☐ 자연환경자산, 지속가능한 공존
☐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
☐ 디지털 강국,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

핵심과제 1 : [안전] 안전한 환경관리, 든든한 민생

가 새로 짠 물관리 百年之計, 본격 실행

- ◇ (홍수) **스마트 예보** + **물그릇 확대** →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.
 ↳ AI 예보 ↳ 신규 댐, 준설 등
- ◇ (가뭄) **민생과 산업에 물이 끊김 없이 흐르게** 하겠습니다.

1 치수대책 전환 원년

- (스마트 예보) 올해 홍수기부터(5월~), 인공지능(AI) 예보 본격 시행
 - 빠르고 정확하게, 전국 지류까지 촘촘한 예보
 ↳ 전문가 → AI(전문가 검증) ↳ 대하천 중심 75개소 → 지류·지천 포함 223개소
 - 경보 발령 → 즉시 지역에 전파(유선 부단체장) → 지자체 긴급조치(통제 대피 등)
- (저지대)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에게 침수 위험 신속 안내
 - 문자('24.5~, 지도·위치정보) + 내비게이션 서비스('24.7~) → 대피·우회 유도
 - 하천범람지도('23년)에 이어, 도시침수지도 조기 제공(당초 '25년 → '24년)
- (인프라 정비) 국가 주도의 물그릇 등 획기적 확대
 - (지류·지천)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(10개), 국가하천 수위 영향 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국가가 직접 정비(20개), 하천 준설 본격 확대 등
 - (댐) 신규 댐 건설 등 10개소 추진(댐 기본구상 10개소, 타당성 조사 3개소)
 - (도심) 대심도 빗물터널(강남, 광화문), 지하방수로(도림천) 사업 착수('24), 하수관 키우기 사업 확대('23년, 1,541억 원 → '24년, 3,275억 원)
- (안전관리) 시설기준은 높이고, 취약시설은 중점 관리
 - 효과적 홍수 방어를 위해 제방 등 주요시설 중심 안전기준 상향*
 * 홍수방어목표 선택적 상향 (최대 200년 → 500년 빈도 대응) 등
 - 홍수 취약 지구 再조사·지정('24.4) → 홍수기 前·中·後 일제 점검 등

2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

□ (4대강 보) 정상화^{'23년} → 적극 활용

- 보에서 가뭄지역 물 공급 ('24~'25 방안 마련 (예) 백제보 → 보령댐 도수로)
- 탄력적 보 운영을 통해 농업용수(수막재배 등) 공급, 소수력 발전 등에 활용

□ (대체 수자원 개발) 물 부족 지역에 맞춤형 공급방안 마련

- (해수 담수화) 국내 최대규모(10만 톤/일) 대산 산업단지 완공('25.上), 작년 가뭄을 겪은 여수 산업단지에 신규사업(15만톤/일) 추진
- (하수 재이용) 산업단지 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재이용 확대 추진(연간 44백만톤*)
* 여수(~'25년), 청주(~'24년), 보령(~'26년), 상주(~'27년)
- (지하수 저류댐) 섬·산간 지역에 확대(상세조사 10개소 설계 7개소 시공 3개소)
* 통영 옥지도, 웅진 덕적도, 양평 양동 3개소 완공시 1,460톤/일 공급
- (공공관정) 노후관정 정비(20개 사군, 마을단위 공공관정 설치(2개소))

3 수질 오염 불안 해소

□ (먹는 물) AI·빅데이터 기반 정수장 운영, 수질 관리 자동 최적화

※ [광역] '24년까지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완료(43개소), [지방] AI정수장 시범사업 추진

□ (녹조) 오염원 집중관리를 통한 사전예방 + 발생 시 신속 대응

- (사전예방) 가축분뇨*, 오수시설** 등 관리강화로 원인물질 유입 차단
* 야적퇴비 수거사업 쏠수계 확대 / ** 낙동강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관리.기술지원 등
- (조기대응) 발생 징후 시, 댐·보·하굿둑 연계 운영으로 일시 방류(플러싱)
- (신속제거) 상습 多 발생지역에 녹조 제거 장비 확충('24, 제거선 22대)
- (국민소통) 물·공기 중 조류독소 전문가 공개검증('23.9~'24.3, 물환경학회)

□ (수질사고) 사고대응 및 신속 방제를 위한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* 구축 (대구, ~'27) 및 수질 측정센터 확대(낙동강 → 4대강)

* (역할) ①24시간 사고 모니터링, ②현장 실습형 교육·훈련, ③전문 방제 기술·장비 개발 등

나 모두가 숨쉬는 공기, 깨끗하고 건강하게

◇ OECD 하위권 수준의 **초미세먼지** 농도, **중위권으로 도약**하겠습니다.

※ '22년 농도($\mu\text{g}/\text{m}^3$) : 미국·일본 9, 프랑스 11.5, 스위스 10, 한국 17 ('27년 목표 13)

1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

- (수송)** '24년 무공해차 90만대(누적) 보급(임기 내 200만대)
 - (무공해차) 고성능 전기·수소차 확산 위해 보조금 차등 강화
 - 청정수소 등 CFE 확대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·미세먼지 동시 저감
 - (경유차) 노후차 폐차 확대* + 신규 택배·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사용제한
 - * 4등급차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('23, 7만대→'24, 10.5만대)
- (사업장)** 미세먼지 저감 시설 적정 가동여부를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 확대
 - * △TMS, IoT 부착대상 확대(6천개소), △대상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(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)
 - 고효율 저감시설 도입 용자(24억),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(77억)
- (생활)** 취약계층 시설, 다중이용시설 중심 저감사업 확대
 - (취약계층) 학교 청정기 설치 完(~'22, 교육부 협업), 가스열펌프 신규설치 제한·저감장치 부착(1만대),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컨설팅·개선 확대(500개소)
 - (다중이용시설)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확대('23, 67억 → '24, 86억), 조리공간 요리매연 실태조사 및 방지시설 시범사업 확대('24, 10개소)

2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

- (계절관리제)** ①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 확대(수도권·충청·호남→'24, 전국), ②지역별 기간 연장*, ③ 대규모 배출사업장 감축 제도화('24.12~)
 - * [현행] 12월~3월 →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등 여건에 따라 연장 검토
- (국제협력)** ①한·중 고농도 소통채널 운영, 예보정보 상시 공유, ②협력 확대(동아시아대기파트너십 등), ③美 NASA와 공동조사 등

다

생활 주변 환경위험, 꼼꼼한 안전망 구축

◇ 생활밀착형 환경안전망, 안전에 안심을 더하겠습니다.

1 안전한 화학물질 · 제품 사용

- (맞춤형 정보)**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명 정보 표기 → 원료 안전성까지 표시*
* 자율안전정보제 시범사업('24.下) :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등급 유형화(안심/양호/보통/관심)
- (불법 화학제품 차단)** 해외구매대행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확대* 및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 불법제품 감시 확대**
* ('23) 6개 → ('24) 20개 품목, ** ('23) 1.5만개 → ('24) 2만개 판매처
- (화학사고 예방지원)** 취약업종 대상 ^{가칭}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지정하고 집중지원* → 화학안전 선도사업장 창출 및 우수사례 전파
* 화학안전 설비 교체·개선 비용 보조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, 컨설팅 등

2 야생동물과의 공존

- (질병 차단)** 야생동물 검역 신설('24.5~), 동물매개 질병 해외 유입 방지
※ [기존] 가축전염병(농식품부) 및 수산생물질병(해수부) + [신규] 야생동물질병(환경부)
- (피해 예방)**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, 농·어촌 → 도심지까지 확대*
* 떼까마귀, 집비둘기 등 도심 속 야생동물 피해예방 위한 분변가림막 등 설치('24.1~)
- (전시동물)** ^{동물원}사육환경 개선, ^{동물카페}전시 금지** → 관람객 안전 + 동물복지 제고
* 영세동물원 대상 컨설팅 실시('24.6~) 등 / ** 유가방치동물 적정시설(생태원 등) 이관 지원
- (외래종 차단)** 3중 안전장치* 도입, ①유입 차단, ②모니터링, ③신속 제거
* ① 수입·반입 신고 강화, ② 모니터링 지역 확대(섬 추가), ③ 新제거기술 도입 등

핵심과제 2 : **[성장]** 무탄소 녹색성장, 단단한 경제

가 국가 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

- ◇ **환경무역장벽**을 넘어 우리 기업의 **탄소경쟁력 강화**를 지원하겠습니다.
↳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등
- ◇ 생산에서 소비, 재활용까지 **전단계 관리**로 **자원안보**에 기여하겠습니다.
- ◇ **국가 전략산업** 전폭 지원, **경제성장**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↳ 6대 수출산업 : 반도체, 자동차, 석유화학, 철강,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 등

1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

- ◆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NDC 이행점검(격년), 2035 차기 NDC 제출('25)
- **(이행력)** 기업 탄소경쟁력 제고, 차질 없는 NDC 이행의 원동력
 - (설비) 연료전환 등 감축설비 설치·교체 지원('24년, 1,277억원)
 - (기술) 혁신 기술 유도를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*(CCfD) 도입 기반 마련**
 - *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: 기업이 저탄소기술 도입시, 정부가 탄소가격 보장
 - ** 법적근거 마련, 적용기술 검토, 시범사업('25년) 방법론 마련 등
 - (제도) 감축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*토록 배출권거래제 개선
 - * 유상할당·BM할당 상향,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 등('24.下 제4차 기본계획 수립)
- **(로드맵)** 과학·기술에 기반한 실행가능한 2035년 NDC 수립 추진('25년)
 - 객관·과학적 모델링 + 사회각계 참여 → 합리적 감축수단 도출 및 검증
- **(무역장벽)** 위기 극복을 넘어, 탄소중립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
 - (CBAM) 컨설팅*, 해설서, 헬프데스크 운영 등 수출기업 밀착 지원
 - *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1:1 컨설팅
 - (ESG정보) ESG공시 글로벌 정합성* 제고하여 기업가치, 투자 기회 증대
 - * 국제표준에 맞게 환경정보 공개항목 개편, 공개시기 조정(12→8월) 등

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

◆ 자원안보 위기 속 순환경제시장 급성장 : '22, 3,380억 달러 → '26, 7,120억 달러 전망

□ (생산설계) 재활용 쉬운 제품 생산, 재생원료 사용 확대하여 기업 감량 유도

- 재활용 용이성 평가 대상 확대(PET 등 2종 → 유리, 필름류 등 6종)
- 재생원료 사용목표 강화('23, 3% → '25, 10%) + 대상 확대(음료PET 추가)

□ (소비) 자발적 참여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“일회용품 ↓, 다회용품 ↑”

- (국민) 탄소실천증립포인트 대상 확대*(다회용기텀블러, **ByeByePlastic** 등 참여캠페인)
* [현행] 프랜차이즈 카페 중심 → [개선] 개인 운영 카페 등 단계적 확대
- (매장) 다회용기 전환 지원 확대('24, 89억원) 저금리 대출(중기부 협업)

□ (재활용)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,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 대응

- (제도 개선) 활용가치 높은 폐기물 대상 규제 면제 → 순환이용 촉진
 - (순환자원) 안전성·경제성 확보된 폐기물을 별도 지정·고시('24.1~)
* 폐지, 고철, 폐금속캔, 알루미늄, 구리, 전기차 폐배터리, 폐유리 등 7개 → 향후 지속 확대
 - (재활용 인정) 폐배터리, 폐유 등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재활용제품으로 인정
 - (규제샌드박스)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·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

< 핵심자원별 순환이용 → 공급망 활성화 방안 >

폐배터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수 거) 거점수거센터 확대 : 무상수거, 폐차장, 정비소 등 • (이력관리) 제조~순환이용 소주기 이력정보시스템 구축(~'27, 나주) • (성능평가)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구축(~'25), 신속·대량 평가(1~2대/일→150대/일)
폐식용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이오연료·원료로 활용하는 재활용기준 마련 * '25년부터 EU 내 이륙 비행기의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의무화
공정 부산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유가금속) 유해성 관리 방안 마련 → 순환자원 지정 • (폐원단, 식품부산물) 지자체, 유관단체, 업체 등과 회수·재활용 시범사업 추진
커피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체연료·재활용 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모델 발굴(340억/년 매립비용 절감)

나

그린오션 녹색산업,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

◇ '27년까지 **녹색 내수시장을 3배 이상** 키우겠습니다.

※ (녹색투자) '22년 1.8조원 → '27년 5.8조원 (예비그린유니콘) '22년 0개 → '27년 10개

◇ **녹색산업 수주·수출 매년 10% 이상 확대**해 나가겠습니다.

※ 녹색산업 수주·수출 규모 : '23년 20조원 → '24년 22조원 → 임기 내 100조원 달성

◇ **녹색투자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에 보탬**이 되겠습니다.

※ 전국 권역별 **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**(~'28), **탄소중립도시 최대 10개소**(~'30) 조성

1 녹색 내수시장 확장

□ **(녹색 투자)** '22년 1.8조원 → '27년 5.8조원* (**누적 30조원**) 확대

* 채권(3조), 융자(2.52조), 자산유동화증권(0.16조), 펀드(0.14조) 등

○ **(외연 확장)** 온실가스 감축* → 물, 순환경제, 생물다양성 등으로 확대**

* '23년 녹색채권 : 무공해차 51%, 제로에너지 건축 11%, 재생에너지 10% 등

** EU Taxonomy 부문 확대 추진 → K-Taxonomy에도 반영

○ **(기술 융합)** 단일 기술, 시설 관리 → 인공지능, 디지털 기술 융복합*

* R&D 기술융합 분야 강세, AI 기반 미래수자원 확보 신규 지원('24~, 총 831억)

□ **(기업 육성)**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정책 차별화

○ **(창업)** '27년까지 **그린스타트업 "1,000개"** 육성(~'22, 385개)

▪ 창업 스프링캠프*('24, 36억, 30개사), 유망기술 보유기업 대상 '보증' 도입

* 전문 창업기획자가 직접 기업을 발굴·투자하고, 교육·멘토링·컨설팅까지 연계

○ **(중소·벤처기업)** 자금조달 애로 해소

▪ 유동화증권 발행('24, 80개사, 138억원), 민관합동 펀드('24, 904억원), 보증공급 등

○ **(스케일업)** '27년 예비 그린유니콘(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) **"10개"** 육성('22, 0개)

▪ 녹색채권·펀드 투자 대상에 **M&A** 목적 포함 → 대형화, 경쟁력 강화

② 녹색투자가 이끄는 지역 활성화

□ (녹색거점) 경제·고용·거주 + 지역 탄소경쟁력 강화 중심

○ (녹색융합클러스터) 지역산업 연계 전국 확대('23, 2개소 → '28, 10개소)

▪ 녹색산업·첨단산업 연계, 지역산업 **新성장동력 확보***

* [예시] 춘천 수열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데이터센터, 스마트팜 등 입주 → 대청댐 충주댐 확산 추진

▪ 클러스터별 **맞춤형 인력공급***, 청년채용 지원

* 지역별 특화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특성화대학원(52개)·특성화고(5개) 재편 추진

<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(안) >

구분	창업벤처	물	전기차 폐배터리	Post- 플라스틱	청정 대기	폐반도체	태양광 폐패널	바이오 에너지	자원순환 기술	수열
지역	인천서구 (조성)	대구 (조성)	포항 블루밸리	부산 생곡	광주	구미	해남	보령	제주	춘천

○ (탄소중립도시) 최초 선정*('24, 2개소) → 지역주도 탄소중립 특화모델 구축

* '24년 최초 선정 이후, '30년까지 최대 10개소 조성 예정

□ (지역재생) 오염되었던 지역을 “주민건강 + 지역발전” 선도모델화

○ (서천) 舊 장항제련소 주변부지 →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(생태습지·탐방로 등)

○ (김포) 거물대리(주물공장 일대) → 오염정화, 수소·전기차 클러스터 조성

□ (지역상생) “수익분배, 지역채용, 관광명소”로서 수상태양광 시설 확산*

* ('24) 임하댐 등 5개소 개발 추진, 연간 186.7MW, 9만 가구 사용

<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지역상생 사례 >

- 수익분배 : 지역주민 투자비율에 따라 4~10% 고정 이자수익 배분
- 지역채용 : 유지보수·환경감시 인력으로 지역주민 채용
- 관광명소화 : 합천군 상징인 매화를 형상화한 “매화꽃 태양광” 조성

□ (수소경제) 액화수소 생산·충전·활용 산업 투자 확대, “수소경제 활성화”

※ [인천] 액화수소 생산·충전소(~'25, 5개소)/수소버스('24, 500대 이상) 확대, 연료전지 투자

③ 세계로 뻗는 K-녹색산업 : 잠재력을 경쟁력으로

□ (3대 주력산업 수출) 3대 녹색 신산업 중심 수출로 '24년 22조원 달성

- (탄소중립) ①그린수소 생산(중동 추가 수주, 북미·호주 신규 발굴), ②매립가스 발전(중양아시아 추가 수주,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 진출) 등
- (스마트 물) ①수력발전(조지아 재추진, 동남아 현지 수요 사업화), ②상·하수도(사우디 설계 참여, 인니 등 동남아 사업 본격 착공) ③ICT물관리 등
- (순환경제) AI소각로(동남아 시범운영, 동유럽 진출 추진) 등

□ (맞춤형 공략) 민·관협업 수주지원 + 현지진단·분석 → 현지 맞춤형 진출

- (민·관협업) 민·관 원팀 협력으로 녹색산업 현장 중심 세일즈 전개
※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활성화, 1:1 전략회의 상시 소통,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
- (수요창출) 현지 환경난제 진단·해소방안 마련 + 진출시장 주도적 창출
※ 전문가기업으로 구성된 현지 진단팀 파견해 국가별 환경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
- (재정지원) 녹색수출펀드* 신설 → 성장가능성이 큰 프로젝트 집중 투자
*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('24~'28, 4천억원(정부 출자 3천억원, 민간 투자 1천억원))

< 지역별 환경난제 및 집중 수주지원 분야 예시 >



□ **(강소기업 육성)** 녹색수출 파이프라인 구축

- (지원) 수출전략 컨설팅* + 맞춤형 역량강화** → 수출 동력화
 - * 유망기술 특성에 따라 진출 국가기업, 유통망 구축방안 등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
 - ** 시제품 제작, 현지 실증, 용자금 등 지원
- (소·부·장) 녹색특화무역상사* + 통관·관세 서비스 → 소부장 해외진출 가속
 - * 대기업 및 무역상사 지정('24, 20개사) → 수출품목 발굴, 판매계약 체결 등 브릿지 역할 수행
 - ** 통관·관세 애로에 대한 밀착 컨설팅 확대('23, 20개사 → '24, 40개사)
- (유통망 확대) 국제 공동 R&D, 현지 투자 설명회 및 협력사 발굴 등

□ **(전략적 연계)**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 활용

- (재원 다변화) 단일 프로젝트 내 국제감축사업·ODA·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연계 → 사업 선정부터 국내기업 진출 분야 집중 반영
 - ※ [인니 청정수소 보급사업 : GGGI, 현대차 협업]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및 메탄가스 포집(국제감축·ODA) → 수소생산, 수소충전소 설치(ODA) → 수소차 보급(민간투자)
- (아웃리치 강화) 주요 국제행사(UN 기후총회, 세계 물포럼, 국내 개최 행사* 등)를 통한 네트워크를 녹색기술·인프라 수출 활로개척에 적극 활용
 - ※ UN 기후총회 등에서 국제기구, 기업, 관심국가 정부 등간 교류 기회(포럼, 설명회 등) 확대
 - * '24년 UN 플라스틱협약 회의(부산), '25년 세계환경의날 기념식 국내 개최 예정

< '23 ~ '24년 녹색산업 수주·수출 비교 >

구분	'23년 현황	'24년 목표
목표	20조원	22조원
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내기업 참여사업 단발성 수주 지원 (1:1 전략회의, 수주지원단 등) ▶ 발주처 중심의 G2G 협력 ▶ 대기업 중심 수주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부가 현지 녹색전환 대책 수립하여 해외사업 패키지화→국내기업 참여 ▶ 녹색산업 수출국가 다변화 ▶ 강소기업 수출동력화 지원

다

글로벌 수준으로 환경규제 혁신

- ◇ **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규제, 경직된 규제는 혁신하겠습니다.**
※ 중소기업 규제 애로 설문조사('23.11) : 노동(44.7%) > 환경(25.3%) > 금융·세제(15.3%)
- ◇ **국민·기업 부담은 줄이되, 안전·환경은 지키겠습니다.**

1 선진국보다 엄격한 규제는 현실화

- **(화학물질) 등록기준 조정(0.1→1ton) + 유해화학물질 위험비례 차등관리**
※ 화평법·화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'24.1) 및 시행 예정('25.7)
 - (안전 관리) 소량신규물질 관리 내실화(비공개→공개, 미검증→사후검증 등) 위한 세부절차 마련 및 시범운영
 - (위험비례적 관리) 물질 특성* 및 취급량을 고려한 시설기준(안) 마련('24.6)
* [인체급성] 인체 단화·단기간 노출시 유해, [인체만성] 인체 반복노출시 유해, [생태] 수생생물 유해
- **(토양 내 불소) 자연 배경농도 대비 엄격한 현재 기준(주거지 400mg/kg)을 해외 기준,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**

2 과학기술·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

- **(디스플레이) 디스플레이 제조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시행('24.1~)**
 - 업종 맞춤형 기준* 마련으로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되, 검지·경보 설비 성능기준 구체화 등 안전성은 최대한 확보
* 국제 인증 설비 인정, 첨단 안전장치 갖춘 설비 인정 등
- **(대기오염 총량제) 단년도 총량주의 → 유연성 제고(지역 내 배출총량 유지 조건)**
 - 차입(차년도 허용총량 당겨 사용), 상쇄(사업장 밖 감축 활동) 등 허용('24.8)
- **(환경영향평가) ①환경영향에 따라 차등 평가, ②소규모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평가, ③재난 대응 사업은 평가 제외 등**
 - 평가서 작성 내실화 유도 병행(대행비용 현실화 + 환경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등)

핵심과제 3 : [서비스] 촘촘한 환경복지, 따뜻한 사회

가 자연환경자산, 지속가능한 공존

◇ **우수 자연환경 보전**은 물론, 그 **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겠습니다.**

※ [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'23, 17.45% → '30, 30% / [생태관광 허브 '24, 3개소 → '26, 10개소(全권역)

1 보전과 이용의 조화

□ **(자연가치 제고)**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**환경자산 국토의 30% 확보***

* 범부처 로드맵('23.12) : '30년까지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(OECM) 30% 달성

< 다부처 협력사업 모범사례 >

◇ **(보전 + 이용 사례 : 순천만)** 생태관광지역(환경부) + 습지보호지역(환경부) + 국가정원(산림청)

- △[사유지매입] 총 250억원('16~'23, 130억 / '24, 120억), △[탐방시설] 에코촌 조성('13, 30억)

○ **보호지역 지정**(곡성 반구정 등 2개소↑) + **자연공존지역***(OECM) 발굴

* 보호지역 관련 규제는 없으나, 보전에 기여·관리되는 지역

※ 보호지역·OECM 면적 : '23년, 17,505km² → '24년, 17,750km² (245km² ↑, 여의도 면적의 84배)

□ **(녹색복원)** “**훼손지역 생태가치 회복 + 지역혜택 창출**” 선도모델 확산

○ [경기 고양] **그린벨트 훼손지 → 생태축 복원**, [익산 왕궁] **한센인 축사 → 생태녹지**

※ (경기 고양) 기본·실시설계 착수('24.上~), (익산 왕궁) 복원 기본계획 수립(~'24.下)

2 고품격 생태관광

□ **(취약계층)** 어린이 · 노약자 · 장애인 등 **소외계층 없이 모두 이용***

* 무장애탐방로·야영지 조성, 탐방약자 프로그램 운영(장애인, 시니어) 등 확대

□ **(브랜드화)** 일회성 관광 → 지역에서 **체험 · 체류, 다시 찾는 관광**

○ **(거점형) 권역별 생태관광 허브*** 지정 →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 육성

* ('24년 강원충청경상권 등 3개 → (~'26년 권역별 확대/인프라 우선 지원 운영관리 예산 차등 지원 등

○ **(도심형) 국립공원과 주변 역사·문화자원 연계,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**

* 문체부 등과 지역 관광소재 연계 프로그램 개발협업, 여행정보지 등 홍보 수단 상호 활용

나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

- ◇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겠습니다.
- ◇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피, 환경복지를 이루겠습니다.

1 철저한 환경피해 구제

- **(피해구제)**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+ 신속구제 추진
 - **(창구일원화)**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환경피해 해결
 - * 환경오염, 석면, 살생물제품 피해구제, 건강영향조사(청원), 환경분쟁 조정·연계
 - **(신속구제)** 지역의료기관 활용, 관리체계 효율화* 등 신속·공정 판정
 - * [피해등급] 피해질병 경중도에 따라 피해등급 구분, [구제급여] 중대시급할 경우, 구제급여 선지급
- **(참여형 지원)** 권역별 거버넌스 구성 + 지역맞춤형 건강지원사업 확대
 - **(거버넌스)** 지역주민, 연구기관 등 참여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* 확대**
 - * 지역 환경보건 이슈 선제적 대응 등 지원, ** 23년 11개 → '24년 14개 광역 시도
 - **(지역맞춤)** 지역 특성* 반영한 건강영향조사, 주민건강검진 등 지원사업 확대
 - * 국가산단(울산·여수 등 9개소), 발전소(여수), 난개발지역(부산·김해 등 27개소) 등

2 민감·취약계층 집중 지원

- **(어린이 환경안전)**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 확대*,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의무 위반 및 기준초과제품 자발적 회수('24.2~)
 - * 환경안전진단 : '23년 500 → '24년 1,300개소, 시설개선 : '23년 100 → '24년 850개소
- **(기후위기 적응)** 인프라 구축¹⁾ + 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 및 확산²⁾
 - 1) 폭염·한파대응 쉼터(그늘막, 쿨링포그 등), 결빙취약지 개선 등('24, 95억원)
 - 2) 단열·창호 개선(산업부),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(농림부) 등 관계부처 협업

다

디지털 강국,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

◇ **첨단 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**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※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: 예산 확대('23년 2,087억 → '24년 2,654억)

1] 눈높이 서비스 확대

□ **(편리한 환경서비스)** 국민 참여는 늘리고, 혜택은 넓게

○ **(탄소중립포인트)** 통합모바일앱*, 시스템 민간개방** 등 **사용편의 개선**

* 각 웹에서 운영 중인 '에너지·자동차·녹색실천' 통합, ** 간편로그인, 모바일페이 등 적용

○ **(생활형 배터리 재활용)** 집까지 찾아가는 무상수거로 편리하게 배출*

*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품목에 포함

□ **(통합플랫폼 구축)** 국민이 필요한 정보, 한 눈에 제공

○ **(자동차, ME-CAR)** 배출가스 정보부터 지원혜택까지 쉽게 보는 '내 차 정보'*

* [배출가스] 배출가스 등급, 자동차 검사정보 등 [지원정보] 조기폐차 및 저공해 조치 지원 등

○ **(환경정보, EGIS)** 대기, 물 등 한눈에 보는 '우리동네 환경정보'*

* 미세먼지, 하천 수질·수위, 야생동물질병, 녹지비율, 소음, 환경재난 및 행동요령 등

2] 데이터·AI 기반 환경관리

□ **(과학적 결정 지원)** 관행, 인력 의존 → 빅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

○ **(국립공원)** 사고유형, 핫스팟 분석 → 인력배치, 시설정비 등 조치

※ 드론, 3D모델링 기술 활용한 낙석(落石) 분석, 위험요인 사전 제거(북한산, 설악산 등)

○ **(첨단감시)** 환경위성·드론 활용 **오염 입체 감시** → 관리 사각지대 ↓

* 국가첨단감시센터 운영으로 배출원 통합관리, 첨단감시장비 검교정 강화 등 추진

○ **(환경영향평가)** ICT 기반 평가항목·범위 결정 지원 → 신속성·객관성 제고

○ **(환경보건)** 지역별 환경·건강·사회 빅데이터 분석* →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

* 환경성질환 고위험지역 분포지도, GIS 기반 환경유해요인-건강영향 분석 등

□ **(국제표준 선점)** 세계 최초 스마트 디지털 정수장 국제표준(ISO) 제정 추진

